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4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내용 (총 5건)

- ① '정정당당 공정채용', 취업준비 청년과 소통한다('24.5.14.)
- ② 국민권익위, 광역자치단체·교육청 청렴수준 중점 개선 유도('24.5.7.)
- ③ 국민권익위원회, 스리랑카에 '韓 종합청렴도 평가' DNA 전수('24.5.20.)
- ④ 알쏭달쏭 이해충돌방지법, 퀴즈 맞히고 모바일상품권 받기('24.5.20.)
- ⑤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앞으로 더욱 강화됩니다"('24.5.8.)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렴정책)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044-200-7619)

‘정정당당 공정채용’ , 취업준비 청년과 소통한다

- 국민권익위, 오늘(14일) 2024년 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에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성과 홍보 및 공정채용 상담 진행

(‘24. 5. 14.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역인재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 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에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공정채용 관리 성과와 활동을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충청권 4개 시·도(세종·대전·충북·충남)가 합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서 충청권 공공기관 34개, 지방공기업 15개가 참가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정채용 상담부스를 마련하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층이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와 채용과정의 공정성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청년층의 공정채용에 대한 인식과 경험, 정책 개선 등을 살펴보기 위한 설문조사와 함께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성과와 활동을 소개하는 홍보물도 배포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행사에 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방문하는 만큼 청년세대가 겪은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제 취업에 필요한 공정채용 정보도 홍보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경제활동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채용과정에서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라고 말했다.

이어 “우수한 지역인재들이 공공기관에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부패방지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상식과 정의에 기반한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 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 광역자치단체 · 교육청 청렴수준 중점 개선 유도

- '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시 광역자치단체 · 교육청 부패실태 심층분석 추진
- 오늘(7일)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

(‘24. 5. 7. 국민권익위)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부패사건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청렴수준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7일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 감사관들이 참석하는 '24년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대상: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17개 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17개 시도교육청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4일 확정된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에 종합청렴도 평가의 한 영역*인 ‘부패실태 평가’와는 별도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대해 현 기관장의 임기 중 행하여진 부패사건을 심층분석할 계획을 반영한 바 있다.

* 종합청렴도 = 청렴체감도(60%) + 청렴노력도(40%) - 부패실태(10%)

올해 추진될 부패실태 심층분석은 각급 기관의 자율적인 청렴수준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분석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발생할 부패사건의 예방에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 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스리랑카에 ‘韓 종합청렴도 평가’ DNA 전수

- 스리랑카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원활한 안착을 위해 협력회의 가져
- 정승윤 부위원장, 이다웰라 스리랑카 뇌물부패수사위원장 등 참석

(‘24. 5. 20.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지 시각으로 20일 오전 10시 스리랑카 뇌물부패수사위원회와 반부패 협력 회의를 가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이하 ‘UNDP’)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공유사업’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반부패 협력 회의를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한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UNDP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의 반부패·청렴 제도를 전수해 왔다. 이번에는 스리랑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공유사업’을 전수하고 있다.

이번 반부패 협력 회의는 지난 4월 3일 착수한 스리랑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공유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회의에는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이다웰라 스리랑카 뇌물부패수사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 스리랑카 뇌물부패수사위원회(Commission to Investigate Allegations of Bribery or Corruption, CIABOC) : 부패사건 수사·기소, 공무원 재산등록 심사 등 포괄적인 권한을 보유한 스리랑카의 헌법기관

이번 협력회의에서 양 기관은 자국의 부패척결 노력 및 반부패 정책 현황 및 성과를 소개하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중 ‘청렴노력도 영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도 도입 추진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더불어 스리랑카의 부패척결 현황을 보다 생생히 청취하고 제도의 현지 안착 방안에 대한 다각적 검토 위해 유엔개발계획, 주스리랑카대한민국 대사관과 함께 유관기관 협력회의도 가졌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스리랑카에 우리나라의 반부패 제도 공유 의지를 보여주고 스리랑카 부패 척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알쏭달쏭 이해충돌방지법, 퀴즈 맞히고 모바일상품권 받기

-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주년 맞아 대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온라인 이벤트 개최
- 퀴즈 정답자, 설문조사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만원 상당 모바일상품권 증정

(‘24. 5. 20.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2주간 이벤트를 실시했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하는 5가지의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의 제한·금지 행위 기준 규정

- 신고, 제출 의무 -	- 제한, 금지 행위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⑥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⑦ 가족 채용 제한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⑩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1주차(5.20.~5.24.)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퀴즈 이벤트, 2주차(5.27.~5.31.)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인지도와 효과를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설문조사 이벤트로 진행된다.

퀴즈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설문조사 이벤트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3개의 문제를 모두 맞힌 정답자와 설문조사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각 100명, 1만원 상당)할 예정이다.

※ 추첨 결과 발표: 퀴즈 5.31.(금), 설문조사 6.7.(금) 예정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 라며, “이번 설문조사에서 수렴된 의견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도 모든 국민과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쉽고 정확히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앞으로 더욱 강화됩니다”

- 국민권익위, 윤석열 정부 2년 채용비리 근절 국정과제 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
- 채용비리 신고사건 및 주요 채용비리 현안 조사...작년 선거관리위원회 가족 특혜 채용 의혹 조사로 불공정 채용 의심 사례 353건 적발

(‘24. 5. 8. 국민권익위)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해 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채용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 ‘23.1월 국민권익위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는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공정채용 전문교육, 채용규정 컨설팅 및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 후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하였고, 이 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하여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현황 〉

구분	접수	처리			조사중
		〈불공정 채용〉		〈공정 채용〉	
		이첩	송부	종결	
2024년(4월 현재)	50	-	10	12	28
2023년	131	17	39	75	-

■ 주요 신고사례

- **ㄱ초등학교는 기간제 교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3명을 자의적으로 선발한 후 시험위원들에게 전체 응시자가 아닌 이들의 서류전형 평가표만 작성하라고 강요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정당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확인되어 **기소의견 송치**
- **ㄴ협회는 경력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사전에 내정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하여 시험위원에게 고득점 부여를 지시하고, 해당 채용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수사기관 이첩**
- **ㄷ기관은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으로** 내정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표면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을 실시하면서 지원 자격을 내정자 이력에 맞추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법으로 채용 공정성을 훼손하여 **관련자 증징계 등 요구**

또한 공사공단 등 1,400여개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채용비리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 조사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전수 조사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했으며, 불공정 채용절차로 인해 탈락 처리된 14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임용 또는 다음 채용단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했다.

올해 전수조사는 2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사회적 이슈가 되는 채용비리 의혹사건에 대한 현안조사도 병행하고 있는데,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선거관리위원회 가족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37명의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약 3개월간 현장 조사했다.

불공정 채용으로 적발된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상습적 부실채용이 의심되는 28명에 대해서는 고발했다.

또한 채용비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채용규정 미숙지와 공공기관별 자체 채용규정의 흠결로 인해 채용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채용 전문교육과 채용규정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다.

채용비리 제도개선의 경우 전체 550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기관 비공무원에 대한 공정채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난해 3월 권고한 바 있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청

올해 하반기에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 중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등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390개 기타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적용할 공정 채용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통합채용을 통한 채용 투명성과 행정비용 절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공정채용 전문교육을 위해 공직유관단체의 인사·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매월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기준 총 1,129개 기관 5,398명의 담당자들이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에서 진행한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등을 이수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채용규정에서 상위법령과 지침을 위배하거나 미규정된 사항을 분석하여 규정에 맞는 공정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규 컨설팅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4월 기준 전체 1,412개 공직유관단체 기관 중 35.9%에 해당하는 총 507개 기관의 채용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 개선 권고 빈발 항목: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335개) ▲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331개) 등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근절이라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이어서 “우리 청년세대가 공공부문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라고 강조했다.